

## “尹, 반대세력 제거·권력 독점 위해 계엄”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 2023년부터 준비·김건희 리스크 해소 목적도

군 동원해 사법권 장악·비상입법기구로 입법권 통제…독재 체제 구축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비상계엄이 1년여 전부터 치밀하게 기획된 ‘친위 쿠데타’였다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 군을 동원, 입법·사법권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것이 특검의 최종 결론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총 24명을 내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15일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일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강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그는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에게 비상대권이 있다며 반대파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제 무력 행사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실행 준비는 2023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는 것이 특검의 조사결과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은 군 인사권을 이용해 계엄 실행에 필요한 인물을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 특히 수도권 방어를 담당하는 9사단과 30사단 등 계엄군으로 투입될 부대의 지휘관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물로 채워 넣으며 친정 체제를 구축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려 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등은 2024년 10월부터 비정상적인 군사작전을 감행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 북한의 공격을 빌미로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려 했으나, 북한이 대응하지 않으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외적인 명분 확보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 측은 타깃을 국내 정치권으로 돌렸다.



야당의 예산 삭감과 탄핵 추진 등을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한다는 명목으로 비상계엄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 내 비주류 인사들

까지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의 만찬에서 특정 정치인을 거론하며 신변을 위협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이 선거 결과 조작까지 시도하려 했다는 점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지난 4월 총선 결과를 부정선거로 몰아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군인을 진입시키려 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이를 위해 정보사 요원들을 중심으로 별도 수사 단을 꾸리고, 야구방망이와 망치 등 고문 도구까지 사전에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 세력을 영장 없이 체포해 구금하고, 고문을 통해 사건을 조작하려 했던 1980년 신군부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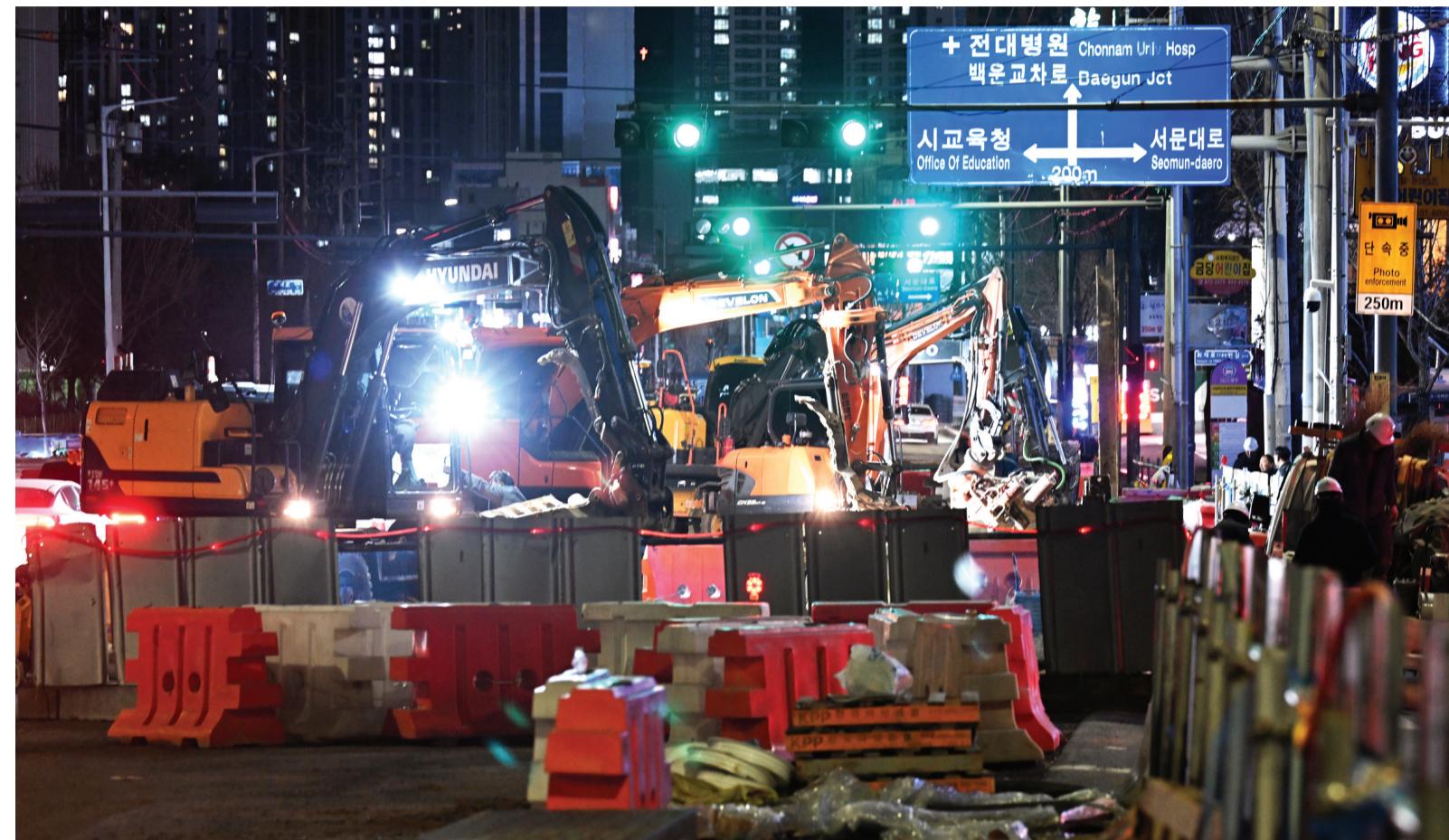
이날 특검이 발표한 공소사실에는 윤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담당 법관을 체포하려 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부 독립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신에게 거스르는 모든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어 제거하려 했다는 것이다. 조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을 가진 자가 헌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국권을 찬탈하려 한 명백한 내란 행위로 규정했다.

특검은 이들이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위법한 명령에 맹종하여 국헌 문란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기소된 24명에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외에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당시 국무위원들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수뇌부가 대거 포함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진 14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국제양궁장 앞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 등 중장비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 광주시가 시민에게 약속한 22일 도로 전면 개방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야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광주 지하철 공사 ‘속도’ 보다 ‘안전’이 우선

###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D-6’

무리한 공기 단축보다 위험 줄여야

광주시가 오는 22일까지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전면 개방을 목표로 막판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무리한 공기 단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참사에서 드러났듯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15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의 도로 개방률은 73%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70.3%였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사이 2.7%포인트 공정을 끌어올린 셈이다.

광주시는 오는 22일까지 백운광장 일부와 지하시설 장비 반입구가 있는 4개 정거장 구간을 제외하고 복공판을 걷어내 도로 포장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공구별 상황을 보면 상무지구 일대인 1공구는

도로 포장이 100% 완료됐고 개방률도 99%에 달해 사설상 마무리 단계다.

나머지 공구는 사정이 다르다. 4공구의 경우 개방률이 59%에 머물러 있고, 2공구와 3공구 역시 각각 67%와 81%의 포장률을 보이고 있다. 시공사 측은 남은 일주일 동안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매일 밤낮으로 공사를 진행중이다.

문제는 이러한 ‘속도전’이 자칫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한다.

광주시가 발주한 이 현장은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정률 73% 상태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을 하다가 참사가 빚어졌다.

노동계는 지연된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 안전보다 속도를 우선시한 관행이 노동자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지적한다.

도시철도 2호선 현장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앞선 이용섭 시장 재임시절 재개된 공사로 인해 수년 간 시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에 달하면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오는 22일까지 ‘도로 전면 개방’을 약속했다. 시민 불편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위해 공사 속도를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자의 피로 누적이나 현장의 안전 수칙 소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약속의 시간’ 보다는 ‘안전의 시간’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이번 도서관 참사는 완공의 속도보다 안전이 먼저라는 준엄한 교훈을 일깨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하철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해 당장의 속도 경쟁을 멈추고 즉각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단순히 복공판을 걷어내고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면서 “도로 위를 달릴 시민들의 안전과 그 도로를 만드는 노동자들의 생명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22일 개방’이라는 날짜는 무의미한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시민도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며 겪는 교통 체증의 고통은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실하게 마감된 도로를 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4060 신중년

다시 일하는

이용대상

전라남도에 거주 중인

40세 이상 신중년 구직자

# 행복!

접근 신중년 일자리지원센터



동부센터

순천시 해룡면 매안로 136, 전남일자리플랫폼 1층

TEL. 061) 750-7736

서부센터

무안군 삼향읍 오룡 3길 2,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TEL. 061) 287-1143